

## 【 민법총칙 】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② 「민법」 제1조에서 법원으로 인정하는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공포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한다.
- ③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으로, 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에 불과한 사실인 관습과 구별된다.
- ④ 이미 관습법으로 승인된 사회생활규범이라고 해도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해야 할 시점에 있어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 ⑤ 국가 간의 조약도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 추인이 인정되는 예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이의를 보류한 것은 아님을 전제로 함)

- ① 취소권자 甲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대해 취소권자 甲이 상대방 乙의 이행을 수령한 경우
- ③ 취소권자 甲의 상대방인 乙이 이행의 청구를 한 경우
- ④ 취소권자 甲이 채권자로서 그 담보의 제공을 받는 경우
- ⑤ 취소권자 甲이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하지만, 취소를 하였을 때에 비로소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 ③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얻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 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4. 성년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② 가정법원이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특정후견의 종료심판을 한다.
- ③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 ④ 피성년후견인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 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5.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 ②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 ③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 ④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6.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경매에 있어서 경매부동산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게 경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 ② 피해자가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이 그러한 피해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악의를 가지고 법률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 ③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지만, 이것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는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불공정성을 소송으로 다투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不提訴) 합의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7. 과실(果實)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 ② 천연과실은 그 원물을 점유한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 ③ 주식배당금과 같은 권리의 과실은 민법상 천연과실이 될 수 없다.
- ④ 법정과실은 당사자가 다르게 약정하지 않는 한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 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물건의 과실에 준한다.

8.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사 기타 대표자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해야 한다.
- ② 행위의 외형상 이사 기타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법인의 정관 목적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니라면,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그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경우, 이사 기타 대표자는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⑤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9. 법률행위 내용의 사회적 타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사건에 관하여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 ② 어느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지급받기로 한 증여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 ⑤ 사회적 타당성을 잃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그 무효로써 그 법률행위의 유효를 믿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0.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법률행위의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법률행위로서의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지 못한 경우인 법률행위의 불성립과 구분된다.
- ②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 ③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의 침해로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1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지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② 착오의 존재 및 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표의자가 증명책임을 진다.

③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지만 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④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증명책임을 표의자로 하여금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하게 하려는 상대방이 부담한다.

⑤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12. 甲은 乙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음이 없이 자신이 乙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乙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乙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② 丙이 행한 추인 여부 확답의 최고에 응하여 乙이 계약을 추인하였으면, 그 추인은 원칙적으로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 ③ 乙이 甲에게 추인하는 경우, 丙이 추인 있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丙에 대하여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 ④ 계약 당시에 甲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丙은 乙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乙이나 甲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⑤ 甲에게 대리권 없음을 丙이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丙은 甲을 상대로 하여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3.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청구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 ②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③ 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
- ④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가집행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⑤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되기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14.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그의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 ②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③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부적임이나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 ④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⑤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5. 한정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가정법원에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 ⑤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16.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사기가 성립하려면 사기자가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착오에 기하여 어떤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 ② 신의칙 및 거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은 기망행위라야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
- ③ 표의자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표의자에게 사기를 행한 경우,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 ④ 상대방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표의자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표의자는 상대방이 이를 알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표의자가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야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7. 「민법」 제126조에서 정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 투자상담 및 권유, 위탁매매약정실적의 제고 등의 업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서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 ②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규정은 임의대리와는 달리 법정대리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

③ 기본대리권이 등기신청행위라 할지라도 표현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어 대물변제라는 사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

④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서 제3자라 함은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지칭하는 것이다.

⑤ 「민법」 제126조에서 정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행위로 인정된다는 점의 증명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18. 甲은 2015년 8월 초 원양어선을 타고 태평양에서 조업하던 중, 그 선박이 침몰하여 같은 해 8월 20일 실종되었다. 甲의 배우자 乙은 2017년 1월 5일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임)

- ① 甲이 출항하기 전에 선임된 재산관리인에 의하여 실종선고 청구 당시까지 적절한 재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더라도, 乙은 甲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甲은 乙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한 때로부터 1년의 기간이 만료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 ③ 甲에 대한 실종선고가 있고 난 후에는 甲이 실종기간 만료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하였다는 확증이 있더라도, 곧 그 실종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 ④ 甲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甲의 재산은 乙에게 상속되고 乙은 재혼할 수 있다.
- ⑤ 실종선고를 받은 甲이 생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甲의 생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상속받은 乙은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해야 한다.

19.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자가 채무의 기한유예는 해주었으나 유예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변제유예의 의사를 표시한 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② 채권이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바뀐 때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된다.
- ③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
- ④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채권의 이행기부터 진행된다.
- 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진행된다.

20. 甲 사단법인(이하 ‘甲 법인’)에는 A, B, C 3인의 이사가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A, B, C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甲 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② A, B, C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甲 법인을 위한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③ 甲 법인과 A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은 A를 대신할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④ 甲 법인의 정관에서 A, B, C 3인이 공동으로 대표행위를 하도록 정해져 있는 경우, 이러한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약의 제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
- ⑤ A, B, C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사의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21.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아니한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보존행위, 이용행위, 개량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 ②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도 허용된다.
- ④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이행에 대해서는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 ⑤ 부동산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잔대금도 수령할 권한이 있다.

22.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조건만이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로 된다.
- ②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 ③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④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⑤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그 의사에 의한다.

23.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 제3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를 제외한 누구에 대하여서도 허위표시는 무효이다.
- ② 허위표시로 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 명령을 받은 경우, 그 채권양도가 허위표시로 무효이더라도 양수인의 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
- ③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④ 허위표시에서 제3자가 당해 허위표시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선의이며 무과실이어야 한다.
- ⑤ 제3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경우, 제3자의 선의 여부에 대하여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4.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 중 취소할 수 있는 것은?

- ① 대리행위
- ②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행위
- ③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계약의 체결행위
- ④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한 행위
- ⑤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25. 신의칙 내지 권리남용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신의칙은 채권관계뿐만 아니라 물권관계나 가족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 ② 계약체결 전 교섭단계에서도 당사자들은 신의칙에 기하여 일정한 주의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 ③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④ 권리행사가 남용으로 인정되면 권리행사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남용으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 ⑤ 강행규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스스로 그러한 행위를 한 당사자가 그 후에 자신의 행위가 강행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